

# 대형공사 분할 발주 입찰제도 손질 시급

도내 건설업계 수주액 83% 폭락  
중심제 대기업 유리 수주난 가속  
대선정국 차기정부에 해결 호소

조기 대선에 따라 차기정부 구성이 이뤄지면서 지역 중소건설사의 건설업 활성화 방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사의 경영난과 수주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2월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5만 명으로 전월 대비 4,000명 감소했다. 건설시장 비수기인 지난해 12월(6만 2,000명)과 올해 1월(5만4,000명)보다도 취업자가 적다.

공사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전체 건설수주액은 48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월 2,975억원보다 무려 83.8%나 줄었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418억원으로 23.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96.9% 줄어든 64억원에 불과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 역시 대형건설사에 유리하고 지역 업체는 수주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낙찰제들은 기술력을 중시,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순수내역입찰, 시공책임형 기술 등의 도입이 예고되면서 지역 중소사의 수주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배치기술자 보유, 공동도급의 실적평가 등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은 자금난과 인력난의 이유로 배치기술자를 상시 보유할 수 없는 등 현재 낙찰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중소건설사 간 공동도급 실효성 확보, 대형공사 분할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경제 활력소

16층 이상 → 10층 이상 확대  
현대건설 등과 양해각서 체결  
건설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

‘원주시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가 매년 확대 시행되며 지역 경기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시행 중이며 참여 대상 사업장을 기존 아파트에 이어 지난해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참여 대상 사업장을 10층 이상 건축물로



원주시 대형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이 30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 시장과 현대건설 김승현 대표, 김재수 건축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다 확대하고 첫 사례로 30일 오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현대건설(대표 김승현)과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피스텔(80호) 및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이번 사업장은 원주 기업도시에 연

면적 9383.32㎡ 이상 10층 규모로 신축된다. 총 사업비 64억원의 50%인 32억원의 건설물량을 지역에 배분하게 된다. 이처럼 아파트에 이어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 사업장까지 참여하면서 원주 지역 업체로 배분이 확정된 건설물량이 18곳 건설현장에서 무려 5000억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현재까지 1000억여원의 물량이 집행되는 등 막대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각 공사 현장의 참여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각종 지역내 개발 호재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대한 해법찾기... 교육제도 '대수술'

건설현장 곳곳이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교육기간방식 등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체계와 교육기관 지정·평가 등 교육기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은 지난 1989년의 무효됐다.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시기·목적 등에 따라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으로 나뉜다. 기본교육은 각 업무별 담당 건설기술자

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전문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초·중·고급 수준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해야 하는 기본·전문교육이다.

중급교육은 자격·경력 요건이 충족돼 지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을, 계속교육은 특급 이상 시공·설계담당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최근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준 다른 교육생 한꺼번에 교육 한정된 기관... 교육과정도 제자리

등급별 교육체계·관리방식 재정립 트렌드 반영 새 프로그램 등 검토

특히 건설기술자들이 최초교육 시한 준료를 앞두고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최초교육을 받기 위해 대거 현장을 비우면서 현장에선 업무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이 토목·건축·플랜트 등 직종 구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초·중·고급 등 수준이 다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교육을 실시하는 탓에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교육기관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어렵고 교육과정도 건설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교육·훈련제도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체계와 교육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자 유형·등급별 교육체계를 고치고 교육방식과 교육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지정요건과 심사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기준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운영·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건설업 환경 변화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시, 건설기술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내리는 제재처분 등도 검토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최초교육 대란이 반복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기간과 방식은 물론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10년간 하도급규제 115개 더 생겨... 업역갈등 부채질

## 글쓴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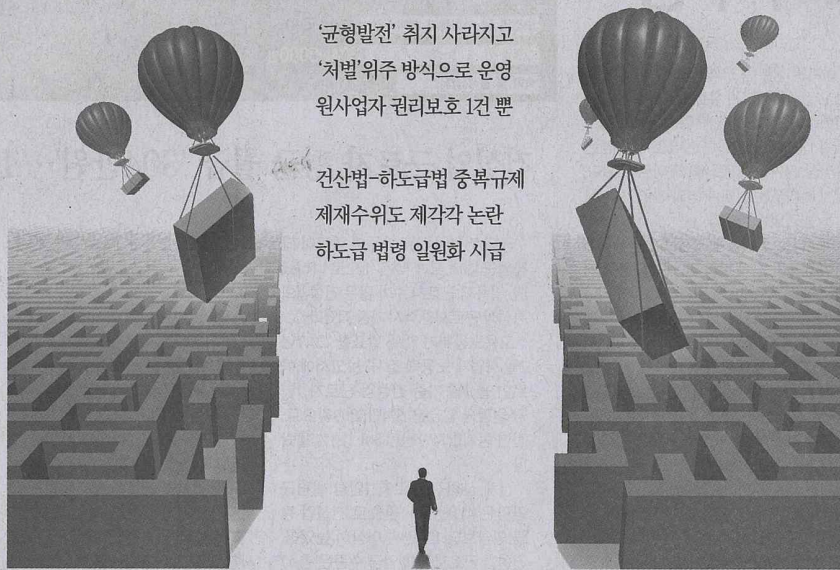
- (1) 박근혜 정부의 건설정책 교훈
- (2) 인프라 경쟁력이 일차이다
- (3) 공공건설시장의 현재
- (4) 해외건설, 출구를 찾아라
- (5) 사용자 부담원칙을 지키자
- (6)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 (7) 대한민국, 안전투자 시급하다
- (8) 건설경기예 달린 산업 생태계
- (9) 실수요자 육체는 금융규제
- (10-끝) 칸막이 걷어내고 규제 풀자

엄고선탈 건설하도급 규제가 원·하도급자 간 업역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법 취지가 사라지고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처벌만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정책은 무려 115개가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이 중 원사업자의 부당한 권리를 인정할 경우는 단 1건이다. 행정업무 효율 확대를 위한 행정처분 5건을 포함하면 대다수인 109건(94.8%)가 수급사업자 권리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신설·강화였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로 양분된 법 체계도 중복 규제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



'균형발전' 취지 사라지고 '차별' 위주 방식으로 운영 원사업자 권리보호 1건 뿐

건설법-하도급법 중복규제 제재수위도 제각각 논란 하도급 법령 일원화 시급

았을 때 원도급자는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회사 규모가 크면 하도급법을, 그 반대는 건설법이 각각 적용된다. 제재 수위도 제각각이다. 하도급법에선 시정조치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양벌

규정)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건설법은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마디로 법적 통일성이 없다.

하도급·건설법만이 아니다. 전곡 59개 지자체에선 건설하도급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등 위임 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도 하도급 규제가 일부 포함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건설하도급 규제는 사후 분쟁 해결과 처벌 위주의 과도한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다"며 "반면 미국·영국 등은 건설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하도급법의 일원화를 주문한다. 건설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서 빼고 건설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제조업 등 타 산업의 하도급 거래와 건설업을 같은 규정으로 규제하지 말고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설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복잡한 법 체계와 소관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단시일내 법 통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처 간 양해각서를 통해 규제 일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양해각서 체결 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약관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해 타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중복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력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도 지난 2008년 양해각서를 통해 통신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복 규제를 막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법령 일원화로 하도급시장의 구조변화와 현실을 법령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체계를 통해 원·하도급자 간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산업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이중삼중’ 건설제재 실효성 높이자

과징금 폭탄에 입찰제한·손해배상까지… 기업들 문 닫을 판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사필귀정’이다. 원칙적으로 예외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건설사의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유독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저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중첩적인 제재는 예방이나 제도 효과보다 기업 존립기반만 뒤흔들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무려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사면 조치로, 입찰제한은 면했다지만 다수의 건설사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경영위기를 맞았다. 몇몇 중견사들의 경우에는 과징금 ‘폭탄’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예방보다 ‘기업 때리기’ 급급  
건설업 특성 고려 배상액 산정  
과징금 환급 등 대안 모색해야

건설사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설계보상비 환급이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돌아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천연가스 공급설비 및 주배관 공사 담합 건과 관련, 총 32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담합 건에 대해 392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건물 포함, 건설사들은 또다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에 이어 천문화적인 손해배상까지 떠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발

주자가 임의로 산정한 배상액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손해소 자체는 물론, 배상액도 낙찰가 외 입찰방법이나 공사비 책정 내용, 설계점수와 투찰률, 담합입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복적인 제재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도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1996년까지 공정거래법에 채택됐던 방식으로, 담합 제재수단 간 정합성을 높이는 최적인 것으로 꼽힌다. 실제 독일은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형사상 제재를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 이내에서 환급해 주거나 손해 판결 확정 후 배상액만큼 과징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송기자 skbong@

100개 넘는 업종·업역…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걸림돌’

엮히고설킨 법령들…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이 해법

통계청이 국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해 제정·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수많은 칸막이에 갇혀 있는 건설산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공사업으로 구분된다.

종합건설업은 다시 건물건설업과 토목건설업으로 나뉘고 전문직별공사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문직별공사업 중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만 보더라도 그 밑에 소방시설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등이 있고, 전기 및 통신 공사

업은 일반 전기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등으로 나뉜다.

이렇게 건설산업 내 개념이 칸막이가 쳐진 업종·업역만 108개에 달한다.

업종·업역별로 적용되는 법적 규율도 각각 다르다 보니 건설산업 정책의 종합적이거나 효율적인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하나의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업종·업역들이 각자 확실한 선을 그어놓은 탓에 영업범위의 경직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 같은 업종·업역 칸막이와 독립적인 법적 규율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융복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공사수행 과정의 비효율은 물론 시설물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업종·업역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업의 자본시장통합법, 통신업의 전기통신사업법, 제조업의 공업발전법 등을 롤모델로 복잡하게 엮히고설킨 건설 관련 법령을 하나로 묶어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는 게 실마리를 풀어줄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등록인허가·신고 등 사업규제와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처벌 등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건설산업통합법을 만들어 건설산업 규제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지 않는 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선진화는 물론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경남기자 knp@

‘주계약자 공동도급·분리발주’ 제한해야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 분쟁 불씨 키워

업계 “발주처가 사업특성 따라 결정하는게 합리적”

2년 전 종합건설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첫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복합공사와 함께 끊임없이 논쟁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분리발주’다. 이 제도들은 모두 일종의 ‘예외 규정’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말한다. 원칙상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사로 수수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4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건설업체에도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하도급 보호를 위해 도입한 예외 규정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사가 아닌, 동등한 공동수급체로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부계약자 간 책임소재에 있다. 일반 계약방식과 달리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데도 계약이행 및 하자 책임과 관련해 종합건설업체에 불리한 연대 책임이 지워진다. 이는 분쟁의 불씨가 된다.

전문가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인 데다, 일반적인 발주 방식이나 계약 책임 원리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계약자 공종의 과실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연계 공종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에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 부계약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개선책으로는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면 부계약자를 동반하지 않고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종합건설업체도 부계약자로 허용해주고 이 경우엔 직접시공등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계약자 공종 금액의 10% 수준을 주계약자의 리스크 관리비용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대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부계약자 공종의 계약 공기를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지체상금 부과 책임과 부계약자 공종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주계약자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분리발주 제도는 동일 구조물 공사에 대한 통합발주 원칙의 또 다른 예외다. 하지만 예외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타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가 의무화됐고 소방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분리발주를 추진 중이다. 국가계약법에서도 발주자의 분리발주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역 간 첨예한 대립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무적 분리발주 공종의 추가 신설 및 대상 공사의 확대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성상 안전 보호를 위한 분리발주 확대는 결국 전체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는 전기·정보통신공사도 발주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가 사업 특성에 따라 분리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 강원도 시멘트산업은 '봄날'

작년 9월부터 철도사업에도  
4분기 생산량은 11.7% 증가  
신규주택 분양시장 호조 한몫  
올 2분기까지 수요 지속될 듯



신규 주택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강원지역의 시멘트산업이 활황을 맞고 있다.  
30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4분기 대비 11.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최장기 철도사업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생산은 차질을 빚지 않았다.  
한은 강원본부는 “당시 74일간의 최장기 파업으로 한때 화물열차 운행 편수가 파업 직전의 3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멘트 감산 우려가 있었다”면서 “아파트 건설용 시멘트 수요가 지속되면서 생산이 호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멘트 생산 순항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강원지역 시멘트 생산은 지난해 1월보다 7.3% 증가했다. 다만 철도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시멘트 재고는 지난해 하반기 이

후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멘트 재고 탓에 생산을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시멘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 골조 공사가 착공 시점으로부터 3~1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기간 중에 시멘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건축 공사가 활황을 보였다”면서 “이에 시멘트 수요도 늘어나 도내 시멘트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생산 호조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기별 주택분양실적이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도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

기 전국 주택분양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2.4%가 줄었고, 4분기에는 22.2%로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고, 금융 당국도 늘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시멘트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시멘트업체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강원본부는 “연탄 가격과 화물운임 상승 등으로 시멘트업체의 수익성이 전년보다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연탄 수입물가지수는 평균 57.9였지만 올해 1월에는 100.5로 높아졌다. 한국철도공사도 올해 2월부터 시멘트와 유연탄의 화물운임을 8.9% 인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 춘천 개발사업 '먹구름' 가득

위도 대규모 관광시설  
헬로키티 아일랜드 무산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 지연 장기화 등 뼈격  
市 “재착공되도록 힘쓸 것”

춘천시 입장에서는 강 건너편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의미를 따라 연결되는 관광벨트에서 한 축이 사라진 셈이다. 또 인근에 건설 중인 대기업 연수원 건립공사도 최근 공사가 중단됐다. 설계 변경을 위해 공사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가 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도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  
중도를 잇는 교량은 제모습을 갖추기 고 있지만, 테마파크 부지는 문화재 보존과 사업비 문제로 첫 삽도 뜨지 못하는 등 ‘안갯속’이다.  
강원도는 조성사업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고민 중으로 이른 시일 내 본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여파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의암호 일대 유람선 사업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레고랜드가 늦어져 유람선 운항 사업도 선뜻 시작을 못 하는 것이다.  
이 밖에 호수변으로 추진이 잇따르던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이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장(3.6km) 케이블카마저 착공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부 사업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자 등을 통해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 역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강원 춘천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해 지역 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춘천시가 관광도시를 내세우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호수를 활용한 의암호 관광벨트사업이 뼈격거리고 있다. 먼저 서면 의암호 한가운데 있는 섬인 위도에 추진했던 대규모 관광시설이 무산됐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위도에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지연되다 최근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 지난해 일부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 이번 사업계획 승인까지 취소한 것이다.  
의암호 준공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섬인 위도는 개발이 추진되기 전까지 야유희 명소였지만, 개발사업이 추진돼 용지 정리 작업 등이 이뤄진 상태다.  
부지 전체가 사유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의암호변에 들어설 예정이던 헬로키티 아일랜드 민자사업도 백지화됐다.

## 조달청 다음주 1042억 규모 용역, 1303억 규모 물품구매 입찰 에너지융합 산단 통합건설사업관리 등 눈길

조달청은 다음주(4.3~4.7) 321건, 1042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과 329건, 1303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건설용역 주요 물량을 살펴보면, 4월4일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유·34억200만원)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식으로 집행된다.  
역시 같은 날 2017~2018년 국가건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한국감정원·58억3600만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가린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6%, 882억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 124억원이다. 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 36억원으로 집행된다.  
건설관련 물품분야 주요 물량을 살펴보면, 4월4일 제주도 중형굴삭기 조달구매(육군제1266부대·49억8700만원)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된다.  
5일에는 5호선 김포공항역 등 8개역 승강장안전전문(PSD) 제작설치(서울시 도시철도공사·168억8300만원)가 규격가격 동시 입

찰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가린다.  
같은 날 수영하수 2단계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부산시 건설본부·26억5800만원)과 대구선북선전철 고장점표정장치 제조구매(한국철도시설공단·9억2700만원)이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어 6일에는 전북본부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아스콘 구매(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24억9000만원)가 역시 적격심사 방식으로 주인을 가린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충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표면세척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7%인 482억원 규모다.  
또 한국전력공사 전기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인 103억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목포항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제작 및 설치 등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2.8%인 298억원이다.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임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0%인 130억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원주~제천 전철전력분야 케이블트레이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2.3%인 290억원으로 집행된다.  
한상준기자 newspla@